

大田直轄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(案)

議案 番號	456
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1994. 8. .

提 出 者：大田直轄市長

1. 提 案 理 由

- '94. 1. 7 법률 제4733호로 「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직업안정법」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직업소개사업 관련사무가 국가사무(노동부장관)에서 시·도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직할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위임된 사무를 대전직할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위임코자 함.

2. 主 要 骨 子

-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조정(안 제2조)
 -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지도·감독, 허가 및 변경, 갱신허가 수리, 폐지신고 수리, 허가취소 및 정지
 - 무허가 직업소개사업자등에 대한 폐쇄조치
 - 무료 및 국내 유료직업소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 -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등
 -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

3. 參 考 事 項

- 관련법령 발췌

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 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위임사항) “별표 1”중 사회과란 제9호 다음에 “제10호”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

소관부서	일련 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사회과	10	<p>○ 직업소개사업관련 사무중 다음의 권한</p> <p>가.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지도감독</p> <p>나.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및 변경, 갱신허가 수리</p> <p>다.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 수리</p> <p>라.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취소 및 정지</p> <p>마. 무허가 직업소개사업자등에 대한 폐쇄조치</p> <p>바. 무료 및 국내 유료직업소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</p> <p>사.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등</p> <p>아.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</p>	<p>직업안정법 제3조</p> <p>동법 제19조</p> <p>동법 제35조</p> <p>동법 제36조</p> <p>동법 제37조</p> <p>동법 제40조</p> <p>동법 제41조</p> <p>동법 제49조</p>	구청장

신·구조문대조표

현행				개정			
소관부서	연번	위임사무명	근거명령	소관부서	연번	위임사무명	근거법령
		< 신설 >		사회과	10	○ 직업소개사업관련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.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지도감독 나.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허가 및 변경 · 갱신허가 수리 다.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폐지신고수리 라.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허가취소 및 정지 마. 무허가 직업소개사업 자 등에 대한 폐쇄 조치 바. 무료 및 국내 유료 직업소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.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등 자. 국내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	직업안정법 제3조 동법제19조 동법제35조 동법제36조 동법제37조 동법제40조 동법제41조 동법제49조

직업소개관련 신·구법조문 대조표

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	직업안정법
<p>●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</p> <p>[1967. 3. 30] [법률제1952호]</p> <p>개정 1974. 12. 24 법률제2709호</p> <p>1981. 4. 8 법률제3422호(정부조직법)</p> <p>1981. 4. 13 법률제3441호(인허가 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서사법등의 일부개정 법률)</p> <p>1982. 4. 3 법률제3560호</p> <p>1989. 6. 16 법률제4135호</p>	<p>● 직업안정법 [1994. 1. 7] [법률제4733호전문개정]</p>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동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흥함으로써 공업 기타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 <p>(개정 '89. 6. 16)</p>	<p>제 1조(목적)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·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,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 9조(무료직업소개사업)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<u>노동부장관의 허가</u>를 받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</p> <p>(개정 '82. 4. 3)</p> <p>②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동직업훈련시설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위하여 무료로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(개정 '82. 4. 3)</p>	<p>제 18조(무료직업소개사업)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<u>서울특별시·직할시장 또는 도지사</u>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</p> <p>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2개도(서울특별시·직할시를 포함한다)이상에 걸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

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	직업안정법
<p>③ 노동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</p>	<p>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나 직업소개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소개시설의 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학생·졸업생 또는 훈련생·수료생을 위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</p> <p>⑤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 (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된 허가의 유효기간)의 만료후 계속하여 당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⑥ 시·도지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(이하 “지방고용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⑦ 시·도지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·전문성등을 고려하여 그가 소개할수 있는 직종을 한정할 수 있다</p> <p>⑧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, 허가대상직종 기타 무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</p>
<p>제 10조(유료직업소개사업)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<u>노동부장관</u>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(개정 '89. 6. 16)</p>	<p>제 19조(유료직업소개사업)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는 소개대상이 되는 노동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</p>

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	직업안정법
<p>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·요건·대상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개정 89. 6. 16)</p> <p>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(개정 '89. 6. 16)</p> <p>④ 노동부장관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개정 '92. 4. 3)</p>	<p>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하되 <u>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</u>, <u>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</u>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</p> <p>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 (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된 허가의 유효기간)의 만료후 계속하여 당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심의회 심의를, 노동부장관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“고용정책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⑤ 노동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자의 업무수행능력·전문성등을 고려하여 그가 소개 할 수 있는 직종을 한정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</p>

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	직업안정법
<p>제 18조(승인·허가 또는 등록사업의 폐지 신고)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, 제10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,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 <u>노동부장관</u>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9조(승인·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등) <u>노동부장관</u>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자, 제10조 제1항·제13조·제14조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,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,</p>	<p>정·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</p> <p>⑦ 노동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</p> <p>⑧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, 허가 대상직종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</p> <p>⑨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</p> <p>제 35조(허가 또는 등록사업의 폐지신고) 제18조, 제1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나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<u>노동부장관</u>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 36조(허가의 취소등) ① <u>노동부장관</u> 또는 시·도사는 제18조·제19조·제2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나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</p>

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	직업안정법
<p>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 또는 모집행위를 정지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제 19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원 개임에 필요한 1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. (전문개정 '89. 6. 16)</p>	<p>모집행위를 정지하게 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가 제 38조 제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재임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 이상 주어야 한다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</p> <p>③ 노동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행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청문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 37조(폐쇄조치) ① <u>노동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</u> 제18조, 제19조, 제23조 제1항 또는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행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·삭제 2. 당해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

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	직업안정법
<p>제 19조의2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.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허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자 5.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(본 신설 '89. 6. 16) 	<p>3. 당해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불인</p> <p>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/p> <p>제 38조(결격사유)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무료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. 이 법, 윤락행위방지법 또는 미성년자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를 내지 제 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
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	직업안정법
<p>제 23조(직원의 교양훈련) 정부는 직업소개·직업지도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제 25조(보고와 검사) ①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자 또는 제9조,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를 하는 자에게 고용, 이직 및 직업소개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직업소개소·사업장 기타 시설에 임검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며 사용자, 근로자, 근로자의 모집자,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다. (개정 '82. 4. 3)</p>	<p>제 40조(직업소개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)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</p> <p>제 41조(보고 및 검사)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8조 또는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 고용, 이직 또는 직업소개와 임금 기타 노동조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노동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장 및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고,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</p> <p>제 43조(수수료)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거나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

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	직업안정법
<p>제 3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 12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 13조 단서, 제 15조 제 1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 20조 또는 제 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<u>노동부장관</u>이 부과·징수한다(신설 '89. 6. 16)</p> <p>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(신설 '89. 6. 16)</p> <p>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는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</p>	<p>제 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 2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 30조 제 1항 또는 제 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 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 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<p>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<u>노동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</u></p> <p>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</p> <p>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는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</p>

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	직업안정법
<p>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(신설 '89. 6. 16)</p>	<p>⑤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附 則</p> <p>제 1조(시행일) 이 법은 199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</p> <p>제 2조(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 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</p>